



메이지의 유령: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문제들

2020년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돌연 사임했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던 자신의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가 세운 기록(2,798일)을 갈아치운 지 불과 5일 후였다. 이로써 7년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아베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아베 신조와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재임기간이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불매운동, 그리고 최근 도쿄에 개소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정보센터의 전시를 둘러싼 잡음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일관계 중 최악의 시기였던 만큼,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가 차가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유령’(specter)이라는 조금은 비과학적/비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프리즘으로 아베의 시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아카데미 저널의 리뷰 논단에 ‘유령’이라니!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아베 총리야말로 재임 초기부터 국회 연설이나 연두 소감 등을 통해 공공연히 ‘메이지 예찬’을 부르짖으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메이지의 ‘환영’에 대한 아베의, 나아가 그를 지지하는 일본 보수 파들의 집착이야말로 지난 8년간 아베 시대의 저변에서 울려 퍼진 집요저음(basso ostinato)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제시했던 미래상인 “새로운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의 ‘종착지’는 메이지라는 ‘이상향’(유토피아_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의)이었던지도 모른다.

이번 리뷰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최근 정보 센터 개소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이다. 2015년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유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애착은 잘 알려져 있다.¹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문화청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다른 문화유산들과는 달리 등록 과정 초기부터 내각 관방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왔다.

그렇다면 정치적 슬로건으로서의 ‘메이지 예찬’의 정체는 무엇이이었을까. 내각 관방이 등록 과정에 직접 개입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유산이라 명명된 ‘폐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상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 속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일본 ‘바깥’이 아닌,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 유산이 갖는 문제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파’해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망도 깃들어 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길잡이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 세계유산 추천서』에 요약되어 있는 공식 내려티브이다. 다른 세계문화유산들과는 달리 일본 내 8개 현 23개에 이르는 이 방대한 폐허들을 하나의 ‘의미’로 묶어내고 그 가치를 유네스코를 위시한 세계에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지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고, 실제로 그 내적 설계에 의해 일련의 유산군(遺産群)이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추천서의 공식 내려티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공식 내려티브가 비단 강제연행의 역사를 생략했다는 외부의 비판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구미 중심주의적 근대화론, 즉 서양의 기술문명이 동양,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이는 추천서의 다이제스트 판본의 첫 페이지에 소개된 ‘유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OUV)’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로부터 일찍 기술을 도입해 산업화를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에 의해 일본은 지정학상의 지위를 세계무대에서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는 점, 즉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의 토대를 확립했다는 것이 이 내려티브의 중심축이다.

이는 2015년 ‘전후 70주년 기념 총리 담화’에서 잘 드러나듯 아베 내각의 기본적인 근대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의 쇼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상황 판단의 실수로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길을 가버린 실수를 했지만 메이지기의 근대국가 건설은 그 자체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그 전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놀로지 중심의 세계관은 산업을 주도해나간 엘리트 중심주의로 이어진다. 조슈, 즉 지금의 야마구치현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조슈 파이브’,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 전시관이나 오무타의 석탄박물관의 전시의 핵심을 차지하는 메이지 테크

1 일종의 ‘뒷담화’이긴 하지만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탄생의 산파였던 가토 고코(加藤康子)에게 한 사석에서 했던 발언(“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언덕 위의 구름’이지. 이것은 내가 밀어 드리겠소”)은 한 주간지(『週聞新潮』 2015.5.22.)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서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은 러일전쟁기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쓴 대표적인 역사소설의 제목으로, ‘메이지 예찬 사관’의 결정체로 알려진 작품이다.

노크라트들의 면면은 이러한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산업유산이 관광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많은 왜곡과 변형, 그리고 뿌리 깊은 엘리트 중심주의는 비단 일본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이념이 인류의 지적·정신적 연대에 기여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정신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엘리트들의 화려한 업적만이 아닌, 암흑의 역사를 기록하고 비업(非業)의 죽음을 기억하는 유적들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전후 일본 사회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탄광마을인 지쿠호에 거주하며 일생에 걸쳐 탄광 노동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추적하고 글로 써온 작가 우에노 히데노부(上野英信)의 작업『追われて行く坑夫たち』(東京:岩波書店, 1960)-이나, 지쿠호, 군함도를 위시한 구 탄광지대 노동자들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힘쓴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지쿠호의 탄광에 대한 많은 기록 사진을 남긴 도몬 켄(土門拳),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여성 갱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을 일생 동안 해온 이데가와 야스코(井手川泰子) 등의 작업은 그 대표적 예들이다. 하지만 전후 일본사회의 시대정신이었던 ‘전후민주주의’가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이렇듯 그들이 애써 포착하고자 했던 인민(people)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 기억들 자체가 공론장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현장을 거닐다 보면,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땅이 과거 불행한 시기 이곳에 강제동원 되어 일하다 죽어간 무수한 사람들의 사체가 켜켜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자각에 이르는 사유의 흔적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고 명명되는 일련의 폐허들에서 발견해야 할 소중한 정신적 가치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과거의 사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수인들의 뼈를 발견해서 묘표를 세워드리고 싶다. 우리 마을의 여기저기에 강제노동에 동원된 무수한 사람들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다. 우리들은 짐짓 모르는 채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은 사체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자 한다(中川雅子『見知らぬわが町: 1995真夏の廃坑』. 福岡: 葦書房, 1996).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공식 내러티브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함께 시작되는 아시아로의 침략, 나아가 식민주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예외주의나 아시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脱亞”) 그들의 욕망을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의 근대화가 바로 류큐(琉球)와 조선, 나아가 중국 등 근린 아시아 국가들을 제물로 삼아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세계사를 특징짓는 ‘제국의 시대’에, 산업화는 해외의 자원 획득과 시장 확대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바로 근린 국가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연결된다. 근대 일본의 산업혁명 역시 청일·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등 일련의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전개되었고, 산업혁명에 의한 중공업화가 조

선반도, 요동반도, 타이완으로의 침략과 점령, 식민지 지배를 수반했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이렇듯 일본의 산업혁명은 아시아와의 관계, 전쟁과 식민주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나아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의 주요 구성 자산인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다카시마·하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등은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들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 등의 강제연행·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장소들이기도 하다.

이미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역시 의식하고 있었다. 2015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의 사토 구니(佐藤地) 유네스코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몇몇 장소(site)에서 그 의사에 반해 연행되어 와서, 엄혹한 환경 아래 노동을 강요당한(働かされた)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Koreans)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로서도 징용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작정이다. 일본은 희생자(victims)를 추도하기 위하여 정보 센터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설명전략에 포함시킬 생각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거듭되는 망언,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치며 2020년 6월 도쿄에 개소한 정보센터의 전시가 이러한 약속을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전시를 실제로 담당했던 ‘세계유산 국민회의’의 지난 활동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군함도의 진실: 조선인 징용공의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 “당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이 사이 좋게 지냈다” 등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원 주민들의 증언만이 소개되거나 왜곡 편집되어 게재되고 있을 뿐, 실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보센터의 전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5년, 그리고 보고서가 제출된 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드디어 일반 공개된 정보센터의 운명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성립 경위 및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싼 이상의 문제점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유산은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맞이하던 시점에서, 과거 경제 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점점 쇠퇴해가는 자국의 경제적·사회문화적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보수정치 세력들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기획들의 한 상징적 결과물이자 ‘귀태’(鬼胎)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쩌면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획을 도약대로 하여 일본은 아베 총리의 소신 그대로 ‘제2의 메이지유신’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 자체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현시점에서 그러한 꿈의 행방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메이지유신으로부터 벌써 15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획 속에 자신들의 근대가 한 줌의 정치가, 테크노크라트들의 ‘영단’(英斷)이 아니라, 사회 내의 수많은 인민들(people)의 피와 땀, 그리고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스러져간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서 쌓아올려졌다는 것, 그리고 또한 류큐병합, 청일전쟁, 타이완의 식민지화, 러일전쟁, 한국의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시아 인민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사회 내부의 많은 시민활동가들이나 양심적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일본이라는 국가는 침략전쟁과 패전, 그리고 전후 민주주의로부터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다시금 메이지의 영광이라는 허상에 혼이 붙들린 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전후 동아시아 기억의 전장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현 일본 정부(사회)의 역사 인식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퇴행적이라는 암울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냉혹한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라는 장에서 이상주의를 다시금 꼬집어내는 것은 무력하고 헛된 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전시기 조선인의 강제동원 및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발언해온 '강제연행진상규명네트워크'를 위시한 지역 사회 내부의 소수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과 함께 초기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희생, 그들의 비업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한일 양 사회에 굳건히 존재하는 내셔널리즘의 장벽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연대의 출발이 아닐까.



이영진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